

“도민안전 · 건강시스템 구축”

6·13 지방선거... 송하진 도지사 후보, 사회안전망 공약 제시 하수처리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치매안심센터 설치도 포함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는 지난 5일 “전북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사회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 후보는 공약 자료집을 발표하고 ‘건강 및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 대한 세부실천



공약을 제시했다.

“스마트한 사람중심 안전건강,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우선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내건 공약은 크게 10개 분야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차산업기반 소규모 하수처리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친환경 전기차 보급 및 경유차 저공해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 지원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탄소섬유 활용 겨울철 노면 결빙 예방 ▲교통안심

행복 콜버스·택시 서비스 확대 ▲다중이용시설 재난위기관리 안전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과 청년 건강검진비 지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등도 포함됐다.

송하진 후보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첨단기술을 적용한 사회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순직교사 · 순국선열 희생정신 기억해야”

전북도교육감 후보자들 현충일 맞아 호국영령 넋 위로

제63회 현충일인 6월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날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은 서거석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바로 알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 6·25 한국전쟁이 왜 발발했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며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학교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는 또 특정후보를 겨냥(?) 비판적 목소리도 동시에 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에 진보와 보수가 없듯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도 이분법적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며 “이를 인위적으로 양분화하고 쟁점화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들은 교육계에 설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토론회를 보면 ‘보수나 진보냐’를 따져 묻고 어떻게 하든 보수로 몰아붙여 이득을 챙기려는 한심한 후보도 있고, 본인의 무능과 불통, 아집으로 발생한 피해를 감추기 위해 (내가)전북대 총장 시절 대학의 위상을 크게 높인 것을

영웅한 방향으로 공격하는 인성이 비뚤어진 후보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호진 후보도 전북순직교육자 추모탑을 방문, 교직에 헌신하다 순직한 교원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했다.

황 후보는 “세월호 참사 등에서 교사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학생사랑의 정신은 오래 기억돼야 한다”면서 “우리 교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스승공경과 제자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순국하신 호국영령들의 고결한 정신을 기억하겠다”면서 “전북 교육이 순직 교사와 순국선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기동취재반

“MBC TV 토론 발언내용 정정”

이항로 진안군수 후보 “케이블카 이용의사 비유”



더불어민주당 기호번 이항로 진안군수 후보는 6일 지난 4일 mbc tv 생방송 토론 중 잘못된

발언이 있었기에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이항로 후보는 “박수우 후보와 상호 주도권 토론에서 제 발언 중 용역 타당성 검토 시 케이블카 찬성이 80%이다 고 말한 내용은 잘못된 표현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용역타당성 검토에서는 진안군민에게 케이블카 찬성과 반대를 묻지 않고 케이블카 설치 시 케이블카 이용의사를 물었고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81%였는데 이용의사 비율을 찬성비율로 말한 내용은 잘못된 표현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항로 후보는 “잘못된 표현으로 두 후보 및 시청자 여러분께 혼신을 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앞으로 박수우, 이흥국 후보에게 정책위주의 선거로 두 후보자님과 진안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같이하자.”고 두 후보에게 공문을 전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환경의 날... 전주시장 후보자 환경정책 협약

환경의날인 지난 5일 전주시장 후보자 환경정책 협약식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완산칠봉 생태습지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민주당 후보 이현웅 전주시장후보, 정의당 오형수 전주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후보(왼쪽부터)가 환경운동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꽃에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지역 6차산업 제품 우수성 수도권에 널리

도,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15개 업체 참가

전북도는 6일 도내 6차 산업 인증업체에서 생산된 6차 산업 제품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고자 대한민국 지방신문협회의(24개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킨텍스 제1 전시장)에 8개 시군 15개 업체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6차 산업의 우수제품을 수도권지역에 집중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도내 6차 산업 유통품평회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가 참여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 8도 우수 특

산물이 한자리에 모인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행사에 많은 수도권 소비자 및 유통업체(바이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고 말했다.

행사 홍보를 위해 회원사를 통한 보도기사 배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전용페이지 개설, 협력, 후원, 협찬기업 배너홍보, 영상, 가로등, 옥외광고, 홍보 전단지 30만장 및 초대권 18만장 배포, 고양시내 일원 계시에 홍보 프랑카드 게시, 지역주부 및 거주자 대상으로 중점 홍보 등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이번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행사는 6차 산업 사업자가 직접 판매 하거나 부득이 직접 판매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판촉사원을 고용하여 위탁판매

도 가능하며, 판로개척 및 판매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관객과 함께하는 요리대회, 지역별 문화공연, 경품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개최하여 판로개척과 고객만족을 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행사로 운영된다.

도 김승수 농축수산물식품장은 “삼락농정(三樂農政)의 제값받는 농업 실현을 위하여 마을상품 및 6차산업 경영체에게는 정성을 다해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반가운 장터가 되어 주고, 수도권 소비자에게는 지역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농식품을 만나는 도·농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고객 시은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6차제품 판매촉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민들의 깨끗한 한표 행사해주길”

김승일 도지사 권한대행, 지방선거 맞아 담화문 발표

전북도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일 전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담화문을 통해 “우리 전북지역의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 도민들의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6.13 지방선거의 전라북도 선거인수는 전체 인구의 82.66%인 152만 7,729

명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2만 4,487명이 증가하고 인구대비 비율도 약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며, 전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1,525,372명) 외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재외국민(81,0명)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1,547명)도 포함됐다.

남성 75만 2,828명(49.3%), 여성 77만 4,901명(50.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만2천73명이 많다. 14개 시·군 가운데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주시 완산구(31만3,929명), 가장 적은 곳은 장수군(2만72명)이다.

한편, 확정된 선거인명부 열람은 6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분인이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투표장행의 투표(8월 9일)와 9일에 전국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동향

공직자 사기양양 시책 약속

백경태 무주군수 후보

백경태 더불어민주당 무주군수 후보는 지난 5일 무주군 공직자의 사기양양을 위한 시책을 모아 발표했다.

백 후보는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공무원의 사기와 역량이 높아야 군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행복한 무주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교육원까지 가지 않고 교육이 진행되도록 강사를 초청해 진행하고 우수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탐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후보는 ▲복지포인트 향상 ▲유연근무제도 조기정착 ▲민원과다 부서 인센티브제공 ▲해외선진지 탐방 확대 ▲중앙부처 및 전북도 인사교류 확대 ▲군수와 직원간 호프데이 운영 등을 약속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열린군수실 운영 등 현안 제시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황인홍 무소속 무주군수 후보가 지난 4일 무주군청 앞에서 유권자, 2000명이 넘는 지지자 등이 운집한 가운데 5대 공약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황 후보는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원 정상화 ▲북향문화공간 도서관 건립 ▲열린군수실 운영 ▲무주미래팀 가동 ▲지역경제활성화 등 5대 공약을 제시, 임기에 실천 하겠다”며 유세를 통해 “농촌이 살아야 무주가 산다”면서 “21년간 농협맨으로 근무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무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위한 마케팅 전도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황인홍 후보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무료 버스와 이·미용 혜택이 주어지는 어르신행복카드를 발급해 드리겠다”라며 어르신 공약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 처벌”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는 장 후보 나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을 ‘무고죄’ 고소로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장영수 후보가 올해 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원위원 위촉에 관한 문자를 군민에게 발송, 장수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장수경찰서조사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조사를 받고 지난달 25일에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

장 후보 캠프측은 “그동안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유포는 물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구태세력이 지역 정치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더 좋은 교육환경 제공토록”

이영숙 장수군수 후보

이영숙 장수군수 후보는 ‘짧은 정수’ 프로젝트로 교육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장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예전과 달리 중학생은 물론 고등학생도 장수에서 학교에 다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장수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도시에서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재비 등을 지원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고, 방과후 학교를 강화해 학생들이 1인 1특기를 갖도록 하며, 불규칙한 학교로 인한 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해준다.

서울 등으로 의미없이 떠나는 수학여행을 해외 역사탐방이나 선진문화를 체험하도록 지원해 학생들이 폭 넓은 문화를 접하며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애인 권익 증진 최선”

김창수 장수군수 후보

김창수 장수군수 후보가 지난 5일 ‘장애인 권익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장수군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참여가 배제된 관(官) 중심의 복지계획이 수립되었고 장애인의 실재적인 목소리에 따른 정책 형성 및 추진된 적이 없었다”면서 장수군 장애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후보가 제시하는 ‘장애인 권익정책’은 ▲통합적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 ▲장애인 복지위원회 실질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의 투명화 및 증액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추진이다.

김 후보는 “사회 전 영역에서 다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원강화와 함께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